

# ‘태극기’가 아니라 ‘촛불’이 진짜 민심이다



사진: 사진공동체재단

현재의  
탄핵 선고 임박  
촛불은 어디로?

2~4면

3·8 여성의 날  
박근혜 정부 하  
여성 노동자의 삶과  
성별 임금격차

10~12면

러시아 1917년  
2월 혁명 100주년

6~7면

사드 배치  
제국주의적 경쟁과  
한반도 불안정

5면

김정남 피살 명분  
대북 압박

8~9면

이대 경비  
노동자 투쟁 승리

4면



# 박근혜 정부 실정(失政)의 4년, 저항의 4년

김문성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이 활로를 찾으려고 박근혜라는 강성 우파 정치인을 전면내세우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다.

1997년 경제 공황과 뒤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박정희 신화가 되살아난 것이 먼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신화가 애초에 기반이었듯이, 박근혜가 한 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단지 과대 포장만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결함투성이로 사실상 사기였던 것이다.

박근혜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한 일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 살리기’였다. 부패가 곁들여진 억압과 노동계급 쥐어짜기 등 말이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내세운 2007년 대선 예비 경선 때와 달리 2012년 대선에선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하며 당선했지만, 그 실체가 바뀔리는 없었다.(그런데 2007년에 줄푸세 공약을 만든 자가 바로 안종범이었다.)

4년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복지 공약이 퍼주기라고 공격했다. 예산도 없는데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잘 알았기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은 박근혜 당선에 일시적으로 사기 저하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완전히 학을 뗀 사람들에게 더 악랄한 자의 5년은 좀 버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 직후 천문학적 손해배상에 짓눌려 온 한진중공업의 투사 최강서 열사가 한 맺힌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 뒤로 노동자와 활동가 빛이 세상을 등졌다. 많은 사람들이 때마침 개봉한 1830년대 프랑스의 민중 봉기를 소재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이래 지난 4년 동안 박근혜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할 수 없었다. 40년 전과 달리 노동자 조직들이 성장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전됐고, 청와대가 더는 강압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의 적폐 4년은 불평등과 고통이 심화된 4년이기도 했지만, 또한 저항과 반격의 4년이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식 경제 살리기의 주된 표적이었던 조직 노동운동이 처음부터 선두에서 왔고, 퇴진 운동을 추동한 핵심 동력이 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결코 진공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 4년도 지겨웠다

### 첫해부터 우익 본색을 드러내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초연금을 기존의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재미를 봤다. 그



4년의 분노가 횃불이 타오르게 한 불쏘시개였다.



2013년 철도 파업은 지금의 퇴진 운동으로 가는 철길을 놓은 대표적 노동자 저항이었다.

러나 이 공약을 뒤집는 데는 당선 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가 내놓은 첫 인사 명단들은 악취가 펄펄 풍겼다. 오죽하면, 이명박 전 낙마가 속출해 박근혜는 취임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해야 했다.

박근혜에게 잘 보이려고 경남지사 홍준표가 2013년 3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기습적으로 폐쇄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아래서 진주의료원 문제로 첫 노동자 투쟁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첫해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적폐들 중 대부분을 다 보여줬다. 복지 후퇴와 고통 전가, 부패인사 등용, 민영화와 공공복지 후퇴, 국가기관을 동원한 공작 정치, 노동조합 공격과 민주적 권리 제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 대국민 사기를 치기 위한 언론 통제 등.

공공의료기관 공격은 곳곳으로 이어졌고, 이와 짝을 이뤄 의료·철도 등 민영화,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 공공 서비스와 기관들의 민영화 드라

이브는 당연히 공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하는 ‘1+1 개악’임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추락 위기를 처음 끌어낸 것이 2013년 말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이었다.

게다가 대선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 박근혜를 지원한 일도 폭로됐다. 이명박의 (심복인 원세훈이 원장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은 민간인·사회운동 사찰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서도 컨트론타워 구실을 했다. 박근혜 못지않게 해 먹은 것이 틀림없을 이명박은 박근혜를 당선시켜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부패한 결탁이 폭로돼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법무장관 ‘황교안’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여기에 유신 체제에서 잘 나갔었고 공안검사의 중시조인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등장했다. 그는 정권 초기의 여수선함을 노동자 조직 공격으로 정리하려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진보당 해산 청구 등이 대표 사례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가 몇 주간 이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무릅쓰며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저항해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 중지 가처분을 이끌어 냈다.

###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임기 둘째 해, 박근혜는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과 기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생색을 냈다. 박근혜는 이 저임금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강요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악이 강요됐다. 이듬해인 2015년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에 보편화됐고, 공무원연금도 결국 삭감됐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공기업·사기업 가리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어겨 가며 행패를 부렸다.

기업주들에게 총 1조 원이 넘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과 담뱃세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 벌충의 책임을 강요한 것이다.

기업주들은 수십억 원 넘게 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대급부를 기대했을 것이다. 노동개악 추진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노조 악화 등 이윤 보호를 위한 무기를 기업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방위적인 고통전가 공세는 결국 조직 노동운동이 선두에서 싸우게 만들어서 정권 퇴진 운동의 토양을 쌓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문화, 스포츠계에 대한 사찰과 부패·비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 친제국주의로 동북아 긴장 고조에 일조하다

친제국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외교 정책도 문제였다. 이념적으로 친미 냉전 반공주의를 계승한 박근혜 당은 안보 위기를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명분으로도 써먹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 의존을 키워 왔고,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지 않은 것도 부분적으로 중국 시장 덕분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미 정책 추진은 국내 정치에서도 날카로운 긴장을 빚어냈다. 여기에 대북 호전 정책, 군비 경쟁 참가 등의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북한 핵무장 능력 강화 등 오히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부추겨 왔다.

안보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매진해 왔다. 박근혜의 안보 브레인들은 미국이 일본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일본의 본격 재무장화를 미국이 지지하는 것을 보며, 미국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한 파트너로 취급될까 봐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상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기 3년차 말부터 나온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또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들은 민심 이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 세월호 참사, 박근혜의 아킬레스 건이 되다

박근혜 정권의 죄악 중에 가장 충격을 준 것은 뭘니 뭘니 해도 세월호 참사일 것이다. 구조 실패로 3백4명의 생



## 이렇게 생각한다

# 운명의 일주일, 대중 동원에 최선을 다할 때

3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조선일보>는 “낮엔 반탄(탄핵 반대), 밤엔 찬탄(탄핵 찬성)”이라고 머리기사 제목을 뽑았다.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의 외상이 만나 한국 문제를 논의한 모스크바 3상회의 직후 벌어진 찬탁(신탁통치 찬성)/반탁(신탁통치 반대) 논란을 연상시키는 제목이다.

실로 삼일절 시위는 지난 넉 달의 시위 중 가장 대결적인 양상을 띠었다. 경찰이 차벽으로 두 집회를 완전히 차단했지만 곳곳에서 적의를 느낄 수 있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퇴진 운동에 밀려 있던 우익이 기를 쓰고 세(勢)를 모아 최대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익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삼일절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날 삼일절 시위에서 우익은 처음으로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다.

우익 집회 참가자들은 나이 든 이들이 압도적이었다. “소외감과 전쟁

에 대한 기억과 트라우마”(〈한겨레〉)를 공유한 이들을 박근혜 측이 비열하게 동원에 이용한 것이다.

현재가 탄핵을 결정할 확률이 높으리라는 예측에 기대어 퇴진행동 측이 다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우익은 발악적으로 상황 반전을 노렸다.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탄핵 여론에 저항하며 반동적 교시를 내렸다. 특히 1월 하순 설 연휴 직전 우익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 TV’와 한 인터뷰가 삼일절 우익 총동원 ‘하명’이었을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강성 우파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김정남 피살로 북한을 악마화하고 안보 위기 의식을 부추길 여건이 마련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우익에게 자신감을 줬을 법하다.

### 미묘하게

청와대는 삼일절 집회에 크게 고무된 듯하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탄핵 찬반 여론이 5 대 5”가 된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현재에 탄핵을 각하하라고

새롭게 요구한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 그러나 탄핵 각하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 현실에서는 기각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럼에도 탄핵소추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현재가 인용/기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에게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보수 신문들도 삼일절을 분수령으로 미묘하게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가 마치 대등한 “민심”인 것처럼 보도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배계급의 다수는 박근혜의 버티기를 곤혹스럽게 여겼다. “넉 달 넘게 주말이면 서울 도심이 대규모 집회로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정상화’(질서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익의 삼일절 동원이 “탄핵 찬반 여론 흐름의 변곡점이 됐을 것”이라는 청와대 측 발언은 교만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여전히 80퍼센트에 육박한다. 반대는 20퍼센트가 안 된다. 현재의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비율도 70퍼센트에 이른다.

또, 비록 시동을 늦게 걸긴 했어도, 퇴진행동 측도 삼일절 맞대응 집회를 열어 30만 명이 참가했다. 삼일절의 거리를 온전히 우익에 내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런 동원은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익의 삼일절 동원은 퇴진 운동 측에 정치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현재가 탄핵 인용을 할 확률이 아직은 더 높아 보이지만, 결론이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진 운동이 팔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지만, 본디 고지를 눈앞에 두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법이다.

일부 언론들은 ‘남은 기간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현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집짓 달리는 기차 위에서 중립을 표방한다. 친기업적이고 우익적인 언론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조선일보>가 이런 호소를 한다는 게 가소롭다.

퇴진행동은 현재의 선고 때까지 대중 동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조합원들에게 최대 동원 대기령을 내려, 현재를 압박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 덕분에 현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것은 퇴진 운동이 거둔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 종료는 아니다. 우익이 현재 결정에 승복해 순순히 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 또, 박근혜는 제거됐어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이 유지돼 국경원 같은 국가 기구들이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자행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조직이 유지되어야 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은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퇴진행동의 정식 명칭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다.

행여 현재가 국민 다수의 바람을 거슬러 탄핵을 기각하면, 그 즉시 대중적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퇴진행동은 현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해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명이 눈앞에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는 자기 탓이 아니고, 단지 사고인 것까지 대통령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 민영화, 국가 공공서비스의 해체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친기업 정책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참사다.

박근혜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첫해에만 6백 개 넘는 규제를 없앴다. 과적과 화물 결박 점검을 완화하고, 재난 관리 예산을 줄여 해경의 구조 능력을 약화시킨 것도 박근혜다.

또한 친미 우익 정부답게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른 것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의 하나가 됐다. 아마 진상을 한사코 감추는 데에도 이런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정권 위협 세력 취급해 그들을 감시했고 진상 규명도 방해했다. 황교안과 우병우도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진상규명특별법에 끝까지 반대했고, 그나마 반쪽짜리 조사위도 끝내 해체시켜 버렸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게 된 이유라도 알자는 소박한 호소에 경찰봉과 물대포로 답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함과 냉혹함, 무책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다. 특히 10~20대 청년세대가 그랬다. 지금 박근혜의 정치적 곤경은 이런 악행에 대한 민중의 복수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은 처음부터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조직 노동운동과도 연대해 더 강해질 수 있었다.

### 민주적 권리를 공격했지만, 아버지처럼 할 수는 없었다

일련의 사악한 짓들에 성공하려면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고통전가와 민주적 권리 억압은 1+1 패키지다.

임기 첫해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불승인) 등 노조 탄압에 열을 올렸고, 기업들의 노조 파괴 공작을 묵인하거나 도왔다. 진보당 일부 간부들과 일부 당원들의 토론회 내용을 과장해 진보당을 해산시켜 정치적 자유도 위축시키려 했다. 블랙리스트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됐다.

또한 차벽 설치와 시위 참가자 처벌 강화, 물대포 살인 진압 등 탄압 강화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짓들의 비극적 상징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일이었다. 바로 그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구속돼 3년형(1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는 민중총궐기를 핑계로 2016년 초 국정원장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런 탄압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퇴진 요구를 거리에서 강력하게 표출했다.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는 정권 퇴진 운동이 1백만 명 넘게 참가하는 강력한 운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수십만 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 집회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주도한 시위였다.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려면, 바로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도 고쳐 써야 했다. 그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다. 이 조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해서 침묵시키려 한 것과도 일부 관계 있다. 이 교과서는 너무 많은 거짓말과 침묵으로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고, 그 결과 5천5백66개 중학교 중 단 1곳만 채택했고 그 학교마저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시위에 직면해 있다.

## 조직 노동자들이 저항의 선도자 구실을 하다

권력욕이 많고 통치 기술에 능한 박근혜는 자기 계급의 이익 보장에 충실하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이재용 등 기업주들이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순순히 협력한 것이다.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하고 잔인한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그러려고 했다. 가령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에 방해될까 봐 세월호 참사 문제를 그렇게도 덮으려 애쓴 것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의 가장 ‘구체제’스런 자들에 정치적 기반을 뒀지만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단지 구체제의 패러디는 아니다. 친기업 고통전가 정책과 친제국주의, 비열한 블랙리스트 통치 등은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퇴진 운동의 저변에 깔린 불만과 분노는 겉으로 표출된 이데올로기보다는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 계급 불평등과 부정한 사회 구조 말이다. 조직 노동운동이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대표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

박근혜 집권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은 대중의 우경화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후퇴와 비관주의를 정당화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노동자 투쟁이 앞장서면 오히려 운동이 고립된다거나, 조직 노동자들은 배불러서 안 싸울 것이라거나, 종북몰이 때문에 진보는 힘을 못 쓸거라는 식의 주장이 유독 많았던 이유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전체 그림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직선으로 좌파적 집행팀을 새로 선출하면서 오히려 전투적 투쟁의 필

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철도 파업에서는 조합원들이 사실상 지도부의 먹살을 잡고 투쟁을 끌고 갔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운동 상층 지도자들의 온건성과 맞서며 현장 조합원 대중에게 투쟁의 정치적 무기를 제공할 조직된 좌파들의 존재와 구실이 중요했던 것이다.

박근혜가 대중의 염원대로 탄핵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오랜 적폐를 상징하는 정권을 폐쇄시킨 대중은 일터와 학교 등에서도 적폐들이 일소되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곳곳에서 전진해야 한다. 노동자 투사들이 이 운동들에 더 폭넓게 참여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랬듯이, 혁명적 좌파가 적절한 분석과 전망과 함께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박근혜가 살 ‘큰집’.



# 박근혜 탄핵 후에도 반정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최영준

박근혜는 우익 집회에 자신감을 얻어 “왜곡 보도와 촛불”을 탓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우익의 반격은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심지어 그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우익의 발악에 맞서야 한다. 그동안 퇴진행동 내 온건파는 우익의 반격에 맞대응하는 것을 꺼렸다. 탄핵이 기정사실화돼 있으니 괜히 들쭉서 역풍 맞지 말고 잠자코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퇴진행동은 우익의 삼일절 총동원령에 신속하게 맞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노동자연대’와 일부 급진좌파가 강력하게 제기해 뒤늦게라도 삼일절 맞불 집회를 잡아, 군복입은 우익들과 태극기·성조기가 광화문광장과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오판으로 하마터면 모퉁이 송연한 상황을 맞을 뻔했다.

그럼에도 사태 전개를 분석해 보면 현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조만간 퇴진행동 안에서 탄핵 이후 퇴진행동의 진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 대선

퇴진 운동은 첫 출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쟁점을 한정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과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들을 연결시켰고, 무엇보다 정권 퇴진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통과



우파는 대선 때까지 무조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퇴진행동도 대선 때까지 거리를 떠나선 안 된다.

돼 박근혜가 더는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매주 광화문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마음속에는 경제 위기 고동전가로 누적된 불만, 심원한 계급 격차에 대한 분노,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살면서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재벌들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 있었다.

우익들도 단지 탄핵 기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경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박근혜가 추진한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국정 교과서 강행, 사드

배치 강행 등 온갖 악행을 추진하며 우익 세력을 결집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최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정권의 위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려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따라서 퇴진 운동은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황교안 퇴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저지 등 박근혜의 온갖 나쁜 정책에 맞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 퇴진행동 내 온건파는 ‘의제가 확대되고 그것을 민심으로 포장하려는 순간 촛불 동력

이 약화된다’고 했지만 실제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특히, 퇴진행동의 정식 명칭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다. 즉,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돌입하더라도 황교안 내각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동안 황교안 내각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구속, 국정원 기능 강화 시도, 안보 위협 등으로 사회 분위기 냉각시키기 등을 해 왔다.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반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탄핵 인용 이후

에도 유지돼야 한다. 지난 4개월간의 투쟁 성과를 디딤돌 삼아 박근혜가 추진해 온 나쁜 정책들에 맞서고 대선 기간에 우파들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치적 기회를 이용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 대선에서도 2천여 시민·사회·진보단체들로 구성된 퇴진행동이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파의 정권 재창출에는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진행동 조직은 유지돼야 하며, 계속해서 촛불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 본관을 점거해 승리하다!

양효영 이화여대 학생,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회원

‘유리한 정세, 단호한 투쟁, 신속한 학생 연대로 노동 조건 후퇴를 막다.’

2월 28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간 서경지부 이대분회 소속 경비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본관 2층 복도를 점거한지 단 4일 만이다. 교섭 결과를 들은 노동자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를 치며 결과를 환영했다.

이화여대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 후퇴를 막기 위해 싸웠다. 재하청 업체가 교체되면서 그동안 일한 근속이 보장되지 않아 퇴직금, 연차 등이 깎이고, 65세 이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상실돼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1차 하청업체인 에스원이나 원정인 이화여대 당국이 인력 보장 요구에 응답을 주지 않아, 인력 감축의 우려도 있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끌던 학교 당국과 에스원은 노동자들이 점거에 들어가자 단 4일 만에 항복



점거 투쟁을 벌인 경비노동자들은 이화여대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서명운동에도 함께했다.

했다. 새롭게 에스원과 재하청 계약을 맺은 타워PMC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약속한 것이다.

우선 인력 문제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합의를 체결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없고, 노조가 정원 확대를 요구할 때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그동안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는

퇴직자 자리를 메우지 않는 방식으로 경비 인력을 축소해 왔는데, 이번 합의에는 퇴직자 결원을 7일 이내에 충원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근속연수를 반영해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고, 65세 이상 조합원에게 실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3년 전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했을 때는 학교 당국과 사측 모두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측의 책임을 묻는 진전을 이룬 것이다.

업체 교체 시 이런 보장을 받게 된 것은 서경지부 소속 분회에서도 이화여대가 처음이라고 한다.

## 재하청

다만 인력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서에는 재하청 업체 대표이사가 서명했지만, 구체적 지급 액수를 적은 협약서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보안총괄팀장이 서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린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한 재하청 구조는 계속 남기 때문에, 재하청 업체가 변경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도 중요하다.

이번 투쟁은 무엇보다 이화여대 당국이 ‘정유라 비리’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고,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과 단호한 점거를 결합시켜 단 며칠 만에 양보를 이끌어 냈다.

3월 2일 개강과 함께 노동자들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은 ‘정유라 비리로 땅에 떨어진 이화여대 명예를 회복하려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며 학교 당국을 규탄했다.

학교 당국으로서도 노동자들의 본관 점거는 지난 여름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혼쭐난 악몽이 다시 떠올랐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로 신속하게 확산됐다. 점거 농성 첫날, 노동자연대 이대모임이 발의해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학내 단체 성명을 조직했다. 긴급하게 조직했음에도 학생회, 동아리, 자치단 위 스무 곳 이상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본관 농성 중인 경비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음료수, 주전부리를 가져다주는 학생들도 많았다.

유리한 정세, 단호한 투쟁, 신속한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한 이번 사례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되길 바란다.



#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김영익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나르려고 헬리콥터가 투입된 듯하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에서 늦어도 7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배치 일정을 앞당겨 사드 배치 여부가 대선 결과에 영향받을 여지를 줄이고 중국의 반발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일을 모두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속전속결이고, 정권은 온갖 탈법·불법 논란도 무시할 태세를 갖췄다. 골프장 입구 마을인 소성리 주민들, 사드 레이더를 지적에서 마주할 김천 농소면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나선 성주 주민들.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평택 대추리(미군기지 확장), 제주 강정마을(제주 해군기지 건설) 주민들의 수난이 떠오른다. 평택, 제주, 성주·김천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한국이 협력하면서 군 시설이 들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2월 2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본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겠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한국을 꼭 집어 MD에 편입시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27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 28일 롯데와 국방부의 계약 체결 등이 이어졌다. 이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박근혜 정권은 성주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 대비용이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는 MD 편입과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사드는 앞으로 미국 MD의 ‘뇌’에 해당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과 직접 통신이 가능해진다. “그건 바로 성주 사드가 한국 방어를 초월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 네트워크의 일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이 성주 사드를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나 미국 본토에 있는 전락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다.”(정육식, 《사드의 모든 것》(유리창, 2017))

3월 1일 시작한 한·미 연합 훈련(독수리/키리졸브연습)에서 한국과 미국은 벌써 성주에 배치될 사드 체계를 활용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습과 사드



박근혜가 불러낸 대표 적폐 사드.

운용이 향후 중국 미사일을 겨냥한 군사 활동에도 적용될 것이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향상에 압박을 느껴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거나 ‘사드 배치 문제에서 박근혜 정권과 트럼프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진보 일각의 분석이 선부른 낙관이었음이 확인됐다.

## 보복 자초

사드 배치 강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에 대한 보복은 이미 시작했고, 중국 여행사들한테는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관영 <환구시보>는 경제적 보

복이 삼성·현대차 등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이재명의 말대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사드 철회가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다.

중국은 군사적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다. <환구시보>가 ‘필요시 성주 사드 정밀 타격’, ‘미사일 증강 배치’, ‘미사일의 돌파 능력 강화’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예비역 장성의 글을 실은 것은 중국 지배자들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제국주의 간 경쟁을 악화시키며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배치 비용마저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 최근 트럼프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비 부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도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

권한대행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옹호하고,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3·1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 구축, MD를 위해 필요했던 한일 군사협정,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한 ‘위안부’ 합의까지, 황교안 내각은 긴밀하게 연결된 이 안보적 폐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사드 조기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드 배치가 좌절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 서평 | 《사드의 모든 것》(정육식 지음)

#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중 갈등의 “최전방”으로 만들 것

김중환

“이번 [조기] 대선을 안보 대선, 사드 대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정치적인 셈법”에 평범한 사람들이 맞서도록 도울 책이 나왔다. 저자 정육식 씨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프레시안> 등에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로 글을 써 온 전문가다.

지금 정부는 사드 배치를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급세 완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사드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집권 시 바로 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도 촉구한다.

첨단 무기나 지정학 문제 등이 낯선 사람들을 위한 책인 만큼, 사드를 둘러싼 24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짹짹, 또 골라서

읽기 편하다.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저자는 약속한다.

이 책은 당장 ‘북핵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 유용하다. 사드의 기술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전 한미연합사 미사일작전 담당자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관계를 익히 인정한다는 대목은 독자를 놀라게 만든다(86쪽).

미국 의회조사국조차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 미사일 방어 공조에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목(142쪽)에 따르면, 북핵 위협은 거짓 명분일 뿐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에는 다른 의의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게 된다.

이 책에서 가장 유용한 부분은 바로 그 저의를 설명하는 13장이다.

저자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

와 역대 미국 관리들의 공개적 발언 등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포위 구상의 일환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오면서 한국을 “최전방 척후병[적의 지형 등을 정찰·탐색하는 병사]”으로 삼고자 수년 동안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 왔음을 보여 준다.

사드 레이더는 바로 척후병의 눈 구실을 할 비밀 병기다. 박근혜가 탄핵 표결을 목전에 두고서도 끝내 밀어붙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바로 이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사드 배치가 동중국해 다투어와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갈등, 중국·대만 간 양안 관계 등 동아시아 갈등의 최전방으로 한반도를 밀어 넣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성주 배치 X-밴드레이더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하는 중국의 탄도 미사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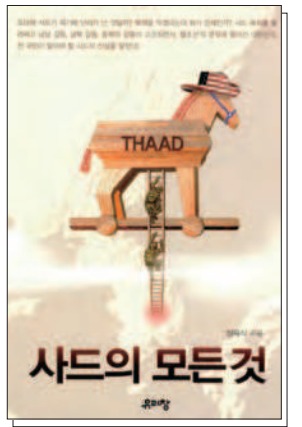
본 교토에 배치된 레이더보다 ... 3분 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존각을 다투는 미사일 격추에서 3분은 몹시 긴 시간이다.

저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 해도,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정세를 더한층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반도 내 사드 레이더를 통해) 방어력이 강화될수록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춘 미국의 ‘지역 분쟁’ 개입은 수월해질 수 있고, 이를 믿고 역내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대담한 행보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면 국내에서는 다시 그에 대응해 군사력을 키우자는 주장이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그러나 이 책에는 대안과 관련해서 약점도 있다. 바로 국가 지배자들 간 협상과 합의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그



사드의 모든 것  
정육식 지음, 유리창, 240쪽, 12,000원

러다 보니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고도 진솔한 협의”를 제안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현재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이는 갈등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각국 정부들은 그 체제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자들로 채워진다.

그럼에도 이 책은 사드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저의를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논박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 러시아 1917년 2월 혁명 100년



1917년 4월 페트로그라드 거리를 행진하는 병사들.

## 병사들은 어떻게 혁명의 편으로 넘어왔을까

【구력】 1917년 2월 23일[신력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페트로그라드에서 코사크 기병대[제정러시아의 시위 진압 부대]가 시위 중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표하길 거부했다. 이 사건은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병사들이 장교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은 화들짝 놀랐다.

이 반란의 발파양에는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억눌러 온 분노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내리 3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2백만 명이 넘는 러시아 병사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더군다나 굶주림이 만연했는데도 부자들은 졸곧 호사스럽게 살아가다. 여성들의 저항이 파업과 시위에 불을 당겼고 페트로그라드를 멈춰 세웠다. 며칠 만에 반란의 불길은 페트로그라드에 주둔하던 군대마저 사로잡았다.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사》에서] 또 다른 반란 사건을 소개했다. 파업에 나선 기계공 2천 명은 코사크 기병대가 자신들을 향해 “자들 달래오지만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시위대는 양쪽으로 갈라져 병사들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도로 모였다. 노동자들 사이에 긴장 따위는 없었다. … 병사들은 [노동자들을 향해] 빙글 웃으며 원크했다. 총을 쏘지 않겠다는 병사들의 약속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장교들은 병사들한테 도심으로 향하는 노동자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코사크 병사들은 자신이 탄 말 밑으로 노동자들이 숙이고 지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2월] 혁명이 승리를 향해 첫발을 내딛은 곳은 코사크 기마의 배 아래였다. 실로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고 썼다.

그 후 며칠에 걸쳐 시위가 더욱 거세졌다.

[2월 26일] 차르의 페트로그라드 군관구 사령관은 해산하지 않는 시위대에게 무조건 발표하라고 명했다.

몇몇 연대가 발표를 거부했고 병사들 사이에서 항명이 확산됐다.

볼린스키 연대가 가장 먼저 반란에 나섰다. 시위대를 쫓아 쫓아내는 장교들의 지시에 են더리를 낸 일부 병사들이 등을 돌리고 노동자들과 나란히 행진했다. 다른 연대들도 이를 뒤따라 반란에 나섰다.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의 병사들이

반란 편에 서자 바이흐로 때가 무르익었다. 그 병사들은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던 장교들을 총으로 쏘 죽였다.

하루 만에 페트로그라드 전체가 사실상 파업에 나섰고, 그때까지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병영들에게까지 반란 분위기가 휩쓸고 지나갔다. 모스크바 등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됐다.

**총성**

정부 무기고를 조직적으로 습격하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그렇게 확보한 소총과 탄약은 이미 반정부 봉기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던 시위대를 무장시키는 데 쓰였다.

무장한 병사와 수병도 반란에 가담하며 차르가 수감한 정치범들을 풀어 줬다.

정부가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전방에서 불러들인 군대는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혁명 편으로 넘어가곤 했다.

2월 27일 병사 7만 명이 파업 노동자 40만 명과 함께 행진하면서 “전제 타도! 전쟁 종식!”을 외쳤다. 차르 밑의 대신들이 이그대를 날쳐보냈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에 병사 분과가 3월 1일에 설립됐고, 끝까지 버티며 차르에 충성하던 부대들도 무장했다.

3월 2일이 되자 니콜라이 2세는 혁명의 힘에 짓눌려 퇴위했다. 동생인 미하일 대공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고작 하루 만에 자라에서 내려왔다.

이어 몇 주간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들이 방방곡곡에서 생겨나 노동자와 병사를 대표했다.

볼셰비키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당시의 전쟁이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급을 선동해 혁명을 일으키고 차르 체제를 무너뜨려야 전쟁을 끝낼 수 있고 그것이 [사회주의자]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혁명적 패배주의”는 다른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전황과 무관하게 지금 정부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볼셰비키 출신의 병사이자 선동가들 무조건 발표하라고 명했다.

몇몇 연대가 발표를 거부했고 병사들 사이에서 항명이 확산됐다.

볼린스키 연대가 가장 먼저 반란에 나섰다. 시위대를 쫓아 쫓아내는 장교들의 지시에 են더리를 낸 일부 병사들이 등을 돌리고 노동자들과 나란히 행진했다. 다른 연대들도 이를 뒤따라 반란에 나섰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43호 / 번역: 이재민



“배급을 늘려라”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 거리를 행진하는 여성 노동자들. 이 시위는 2월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 러시아 1917년 2월혁명의 성격

## 치밀함

1백 년 전 3월 초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2월혁명’이라고 부른다. 제정 러시아의 달력(율리우스력)은 서구의 달력(그레고리우스력)보다 13일이 늦었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는 산업 능력에 버겁게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 중이었으며, 민중의 생필품이 부족했고, 특히 식료품은 배급됐다.

수도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급을 기다리던 여성들이 식료품 배급량이 적은 것에 분노해 항의를 시작했고, 3·8 여성의 날 전날부터는 노동자 파업으로 번졌다.

이 파업은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노동자 대표들을 뽑아 지역 소비에트들을 세우는 것으로 순식간에 발전했다. 일주일 뒤 차르(러시아 황제의 호칭)는 마침내 하야했다.

노동자들과 여성들은 함께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치렀다.

1백 년 전에는 이렇게 노동자 운동과 여성 운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돼 있었다. 남성을 노골적 성차별주의자나 은폐된 성차별주의자로 여

기는 종류의 여성주의는 당시에 거의 지지를 못 받았다.

일찍부터 레닌은 여성 차별과 여성 해방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 그에 관한 소문들을 적잖이 썼다. 일관된 핵심인즉,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여성이 겪는 천대와 차별에 반대하고 여성의 항의와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중간계급 친화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때로 자신의 계급적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때는 필요하면 반자본주의적 비판을 곁들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더 일반적으로 각종 형태의 천대와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 러시아에서는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몹시 천대를 받았다. 특히 유대인은 때로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을 정도로 학대받았다.

## 2월혁명의 성격

2월혁명을 옛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부르주아 혁명이란 또한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좌파가 — 스탈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좌파의 일부도 — 이런 그릇된 정의를

답습하고 있다.

그들은 2월혁명으로 부르주아가 정권부터 레닌은 여성 차별과 여성 해방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 그에 관한 소문들을 적잖이 썼다. 일관된 핵심인즉,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여성이 겪는 천대와 차별에 반대하고 여성의 항의와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중간계급 친화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때로 자신의 계급적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때는 필요하면 반자본주의적 비판을 곁들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더 일반적으로 각종 형태의 천대와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 러시아에서는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몹시 천대를 받았다. 특히 유대인은 때로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을 정도로 학대받았다.

러시아에서는 2월혁명으로 지주 제도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지주제도 폐지는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10월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이뤄졌다.

국민국가로 말하자면, 비록 차르 절대국가는 전복됐어도 그걸 대체한 임시정부는 국가의 핵심인 경찰력도

구축하지 못했고, 군대는 거의 와해 상태였다.

그리고 파업으로 몸살을 앓는 공장

을 자본가들이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정부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나 노동자들에 대해서나 속수무책이었다.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를 자기들의 정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한편, 소비에트는 노동자 국가의 맹아였는데, 도대체 16세기 후반 이래 어떤 부르주아 혁명에서 노동자 국가의 맹아가 생겨난 게 있었는가?

이제 2월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혁명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 군부독재나 파시즘 또는 스탈린주의 — 를 타도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정치 체제로 변화하는 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자본 축적을 주도할 강력한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과 농업에서 자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혁명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통념은 프랑스 혁명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오류일 뿐이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부까지의 네덜란드 혁명과 17세기 중엽 영국 혁명,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러시아에서는 2월혁명으로 지주 제도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지주제도 폐지는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10월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이뤄졌다.

국민국가로 말하자면, 비록 차르 절대국가는 전복됐어도 그걸 대체한 임시정부는 국가의 핵심인 경찰력도 구축하지 못했고, 군대는 거의 와해 상태였다.

그리고 파업으로 몸살을 앓는 공장을 자본가들이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정부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나 노동자들에 대해서나 속수무책이었다.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를 자기들의 정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한편, 소비에트는 노동자 국가의 맹아였는데, 도대체 16세기 후반 이래 어떤 부르주아 혁명에서 노동자 국가의 맹아가 생겨난 게 있었는가?

이제 2월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혁명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 군부독재나 파시즘 또는 스탈린주의 — 를 타도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정치 체제로 변화하는 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자본 축적을 주도할 강력한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과 농업에서 자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혁명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통념은 프랑스 혁명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오류일 뿐이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부까지의 네덜란드 혁명과 17세기 중엽 영국 혁명,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러시아에서는 2월혁명으로 지주 제도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지주제도 폐지는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10월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이뤄졌다.

신앙의 자유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소비에트와 소비에트 정당들이 약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10월혁명이후 시행됐다.

요컨대 임시정부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노동자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이래 지금까지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맹아를 찾을 수 있었던가?

그렇다면, 2월혁명은 뭐였나? 훗날 트로츠키는 10월혁명을 ‘연속혁명’으로 규정하고, 2월혁명은 10월혁명의 전주곡이자 “연속혁명의 에피소드적 단계”라고 규정했다. 연속혁명이란 노동자 혁명이 노동자 권력 장악과 함께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나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레닌도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는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노동자 정부 하에서 구현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민주주의로 성격이 변해서 구현됐다고 말이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나 노동자 민주주의냐

아무튼 2월혁명에서 레닌과 트로츠키는 둘 다 노동자 소비에트(평의회)의 등장에 주목했다. 그들은 그것을 노동자 권력이 정치적 행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 국가가 움트고 있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레닌은 <4월 테제>를 통해 볼셰비키 간부들과 혁명적 노동자들에게 더는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견해는 스탈린주의의 견해와 전혀 다른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을 사회주의자들이 위로부터 기존 국가를 장악하고 그걸 지렛대로 전면적 국유화를 단행하는 것(1928년 소련, 1946년 북한, 1947년 동유럽에 서처럼)으로 이해한다.

레닌과 트로츠키의 사회주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과 똑같은 것으로, 요약하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 또는 노동계급 자력해방이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대체로 확립된 나라(한국 포함)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실현에서는 개혁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런 곳에서도 민주적 권리들(한반도 주민의 경우 민족 통일을 포함함)을 방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나 민중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노동자 민주주의의 씨앗을 발아시키고자 애쓰는 사회주의자로서 민주주의적 요구(박근혜 정부의 부패에 반대하는 것 같은)를 지지해야 한다.

## 2월혁명은 순전히 자발적이었나?

많은 제도권 역사학자들은 누가 러시아 혁명을 조직했는지를 놓고 혁명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1917년 10월 혁명을 ‘쿠데타’로 본다. 왜냐하면 볼셰비키가 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차르를 끌어내린 2월 혁명은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혁명을 상세히 묘사한 레온 트로츠키의 《러시아 혁명사》를 보면 이런 구분이 얼마나 조야한지,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다.

2월 혁명의 승자는 노동자와 병사였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썼듯이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누가 이 혁명을 이끌었는가?”

대다수 평론가들은 이 문제를 “만능 공식에 대입해 아주 간단히 해결했다. 즉, 아무도 혁명을 이끌지 않았다. 혁명은 자력으로 일어났다.”

이런 “자발성 숭배론”은 “어제까지만 해도 [차르 밑에서] 평온하게 관리, 판사, 검사, 변호사, 기업가, 장교 노릇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혁명에 아부하느라 분주한 양반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이었다.

이것은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멍하니 있던” 사회주의자들을 속 편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혁명을 뒤쫓는 데는 훨씬 더 예리한 논쟁이 필요했다. 또 훨씬 더 강력하게 조직될 필요가 있었다.

“의식적이고 단련된 노동자들”이 볼셰비키로 몰려들었고 이것이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차르를 몰아내는 것은 수도에서 일어난 봉기만으로도 가능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려면 전국에 걸친 봉기가 필요했다. 볼셰비키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수도의 노동자들이 너무 이르게 행동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이 너무 늦게 행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또 국가의 심장부를 급습하는 무장 봉기를 조직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밀 유지가 필수불가결했다. 만약 이런 일이 ‘자발성’에 맡겨졌다면 국가는 눈치채고 대비했을 것이다. 봉기가 설사 일어난다 해도 말이다.

## 조직

2월 혁명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은 절반은 진실이었다. 노동자와 병사 자신의 행동이 결정적이었으며 대다수 정치 조직은 노동자들 사이에 영향력이 없거나 혁명을 바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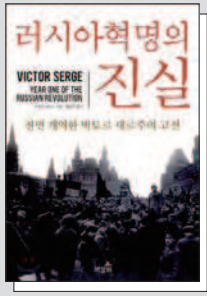
볼셰비키는 예외였지만, 극심한 탄압 때문에 “지도부가 없는” 상태였다. 지도부는 유행지에 있거나 망명 중이었고, 활동기는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며, 간행물은 급지됐다.

그런데도 전국의 노동자와 병사가 조직도 없이 동시에 들고일어난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연론과 거의 모든 정당이 반대했는데도 국가에 맞서 닷새 동안 투쟁을 지속한 것도 경이롭다는 말로 묘사했을 것이다.

노동자와 병사는 그저 무정형의 대중이 아니었다. 이들은 각자의 작업장과 주둔지에서 자신의 경험, 집단적 토론,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 의식을 발전시켰다.

## 추천 도서

|                                                                                       |                                                                                       |
|---------------------------------------------------------------------------------------|---------------------------------------------------------------------------------------|
|  |  |
| <b>세계를 뒤흔든 열출</b><br>존 리드 저/서찬석 역   책갈피   12,000원                                     | <b>러시아혁명의 진실</b><br>빅토르 세르주 저/황동하 역   책갈피   24,000원                                   |



##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김영익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맹비난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김정은!)에 대한 처벌”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백 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위대한 저항을 기념하는 날이었음에도 황교안은 일본 군사대국화를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자며 한·일 협력과 ‘위안부’ 합의의 존중을 강조했다. 김정남 피살이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 폐를 옹호하고 강화하는 좋은 핑계가 된 것이다.

미국도 김정남 피살 사건을 이용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취소해 버렸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에 독가스 VX가 쓰였다고 발표하자, 이 대화를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북한 외교관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VX가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이 문제를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소재로 삼을 공산이 있다.

### 위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언론에 흘렸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라고 주장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 연대〉신문은 그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했다. 그것이 한반도 불

안정을 악화시키고, 북한 노동계급에도 반감만 줄 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도 반대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김정남 피살 문제로 북한을 비난하는 건 매우 역겨운 위선이다. 해외에서 요인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문제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요인 암살·납치 면에서 미국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미국의 “더러운 전쟁”만 봐도, 체 게바라 사살, 아옌데를 죽인 칠레 쿠데타 후원 등 추악한 일들이 많았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이 외부에서 북한을 압박해 진보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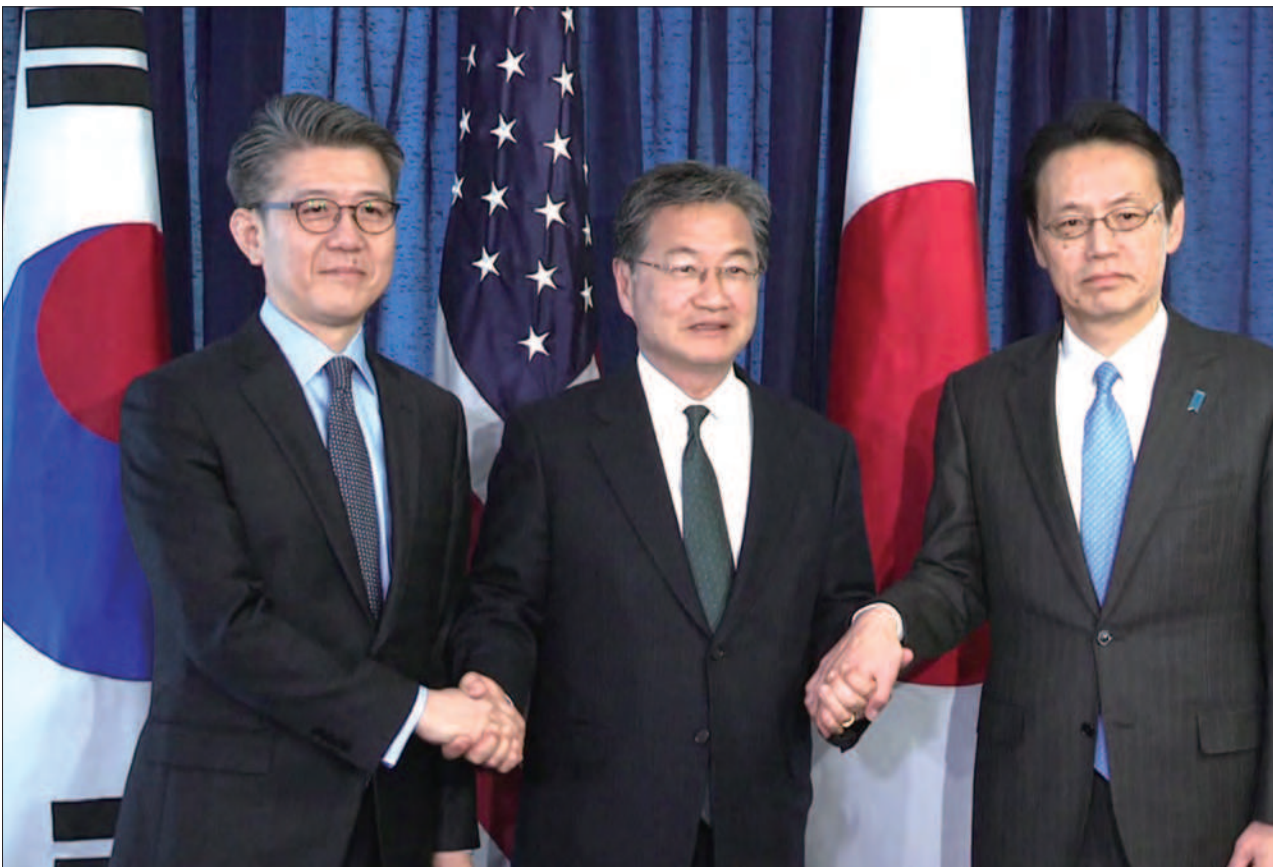
북한은 이미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재를 받으면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

반면 평범한 북한 주민은 제재로 큰 고통을 시달렸다. 가령 박근혜 정권은 대북 제재를 강화한답시고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이 밖에도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유·무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오히려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은 김정은 정권이 내부 불만을 억누르는 구실이 된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자신의 군사 행동과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지금도 트럼프는 북한을 비난하며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처는 중국·러시아·북한의 반발을 부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일 것이다.

김정남 피살은 제국주의적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은 북한 주민에게 가하는 또 다른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행위다.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은 군사 긴장을 높이고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

## 김정은에게 살해 동기가 없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정남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여권명이 김철(김정남이 아니라!)인 북한 공민”의 사인은 “독살이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남한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남한에서도 김정남 피살 사건을 박근혜 정권과 우익이 이용하는 것에 주목하며 미국·남한의 각본에 따른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심의 동기는 겉보기로 그럴 듯하다. 국내에서 우익이 김정남 피살 사건을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데 이용하며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 동원(특히, 삼일절 우익 집회)의 소재로 삼았으니 말이다. 게다가 남한과 서방 지배자들은 각종 음모를 꾸미는 데 선수들이기도 하다. 또한 물증만으로는 이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쾌하게 입증

되기 힘들다는 점도 의심을 키우는 데 한몫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는 허점이 있다. 김정남의 존재가 미국·남한 지배자들에게 주는 실익이 있었음을 무시한다. 그는 이복동생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공공연하게 비난했고, 따라서 서방이 북한을 비난하는 데 도움이 됐던 인물이다. 일본과 한국 언론들이 기회만 되면 김정남과 인터뷰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까닭이다. 국정원 등이 여러 차례 김정남의 망명을 타진했다는 정황 증거도 있다.

그리고 ‘서방 음모’의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곧장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김정남 피살의 동기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행위일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려면 별도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럴 일을 할 막대먹은 정권이 아

니다’ 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주장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뒤통 당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일부 진보·좌파는 일본인들을 납치하지 않았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믿었다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납치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다.

공식 후계자로 부상한 지 2년도 안 돼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한테는 통치 정당성의 취약함이 큰 약점의 하나다. 이 약점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권력 승계를 비난한 김정남이 김정은한테 매우 곱고러운 존재였을 게 틀림없다.

중국과의 관계도 봐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김정은이]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중국과 김정남의 관계가 돈독했다고 보면, 민심의 이반 혹은 외부

##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들

김지윤

북한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박근혜 5촌 간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세삼 주목 받고 있다.

‘원한에 의한 친인척 살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초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와 지난 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

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뤄졌다.

〈그알〉방영 후 박주민 의원 등이 포함된 더민주당 국민조사위원회는 특검에 이 살인 사건과 육영재단 폭력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근혜의 5촌 조카인 박용수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돈을 갚지 않던 박용철(박근혜 5촌 조카)에게 원한을 품고 잔인하게 살해한 후 죄책감에 인근 산에 올라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와 〈그알〉, 〈스포트라이트〉 등이 제기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용철은 몸무게가 1백 킬로그램이 넘는 전직 유도 선수이고 용의자 박용수는 훨씬 체구가 작는데 박용철의 시체에서 별다른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차례 칼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까지 가격해 죽인 방법이 전문가의 솜씨로 보인다는 점, 두 사람에게서 모두 줄피뿔(최면진정제)이 검출된 점, 박용수가 어두컴컴한 새벽에 굳이 살해 장소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에 올라 자살한 점, 박용수의 시체에서 설사약이 녹지도 않은 채 검출된 점, 그의 유서가 화장하라, 매형에게 연락하라는 정도의 메모라는 점 등이 의문점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증언

들과는 달리 〈그알〉 제작진이 취재한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는 좋았다고 한다. 〈그알〉은 박용수가 죽은 장소에 입산 기록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박용수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에 입산한 사람이 3명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

〈그알〉은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근혜 남매들의 다툼에 박용철이 깊숙이 연루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육영재단은 1969년 어린이 복지재단을 표방하며 육영수가 낸 돈 1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기업의 기부·찬조금이 2억 3백64만3천 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낸 돈도 5천만 원이나 된다(〈한겨레 21〉). 흡사 미르재단 설립 과정을 연상케 한다.

육영재단은 부동산 자산만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됐다. 박근혜가 1982년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최태민이 모든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1990년에 박근혜의 동생들인 박근령과 박지만이 최태민의 비리를 문제삼으며 들고일어나 박근혜가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박근령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박근령이 신동욱과 결혼하면서 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박



## 3월 18~19일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 열린다

유엔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즈음해서 국제 공동 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개국에서 국제 공동 행동이 벌어졌다.

그리스에서는 국제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가 해마다 수만 명 규모의 시위를 조직해 왔고, 올해도 큰 규모로 치러질 듯하다. 그리스의 좌파들은 분열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는데, 인종차별 반대와 난민 방어 쟁점은 좌파들이 드물게 단결을 도모하는 쟁점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정장 차림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이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르펜은 주류 정치권의 건축 강요와 부패를 비난하고 이를 무슬림 혐오, 인종차별과 결합시키며 지지율을 지난 몇 년 간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인종차별 반대 운동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경찰의 흑인 청년 강간에 항의해서 파리의 학교 16곳에서 학생 2천 명이 교문을 봉쇄했다. 2월 25일 서부 도시 낭트에서는 2천 명이 마린 르펜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난민 거주 지역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행동도 벌어졌다.

3월 19일의 ‘정의와 존엄성을 위한 행진’은 이런 흐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3월 15일 총선에서 인종차별적 극우 정당인 자유당(PVV)이 사상 처음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당 지도자 빌더스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꾸란과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난민을 추방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선거 직후에 개최될 국제 공동 행

동은 이런 자유당에 맞서 이주민을 방어하는 운동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현지 활동가는 “1980년대 이래로 해마다 이 시기에 시위를 조직했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수만 명 규모의 행진을 조직한 ‘인종차별에 맞서자’가 올해도 대규모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비교적 강력한 좌파 정당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 덕분에 다행히도 극우 세력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은 고배를 마셨다. 영국독립당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 표가 많이 나온 지역구를 노렸지만 노동당에 패배한 것이다.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하고 인종차별에 찌든 사람들’이라는 일각의 설명이 영터리움을 보여 준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지에서 국제 공동 행동이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도 3월 19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2017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열린다. 공동 주최 단체인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등은 “인종차별과 혐오 OUT!”,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며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추방 중단과 합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초 미국의 트럼프 반대 운동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님을 세계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3월 18~19일 국제 공동 행동은 이런 목소리를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하고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

김종환



홍수로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북한 주민.

서지영/해운대/북한

적인 요인에 의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김정남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잠재적 경쟁자 김정남을 제거한 이유입니다.”(〈오마이뉴스〉)

북한 지배 관료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그동안 경계해 왔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계심도 함께 높아졌던 듯하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이미 김정은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 소리를 듣는 것을 걱정했다.

이런 문제가 2013년 북한에서 장성택이 전격 처형된 배경의 하나였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북한 〈로동신문〉에는 이런 논평이 실렸다. “감히 [수령한데] 도전해 나선다면 설사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해도 서슴없이 징벌의 총구를 내대는

대쪽 같은 사람이 … 진짜 신념의 강자다.” 이 말 가운데 “피를 나눈 혈육”이 김정은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그때 회자됐다.

‘김정은이 김정남 피살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명제를 입증하려면,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북 4성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 사회는 시장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진보적 사회’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이제는 안정됐고, 따라서 북한 정권도 안정돼 있어 김정남 살해 같은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동떨어진 섬 같은 곳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오늘날 북한 경제는 세계경제의 리듬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 가격이 국제 시세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점은 오늘날 북한 경제와 세계경제의 연동성을 보여 주는 한 사례다.

한반도 주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이 가열된다는 점도 북한 지배자들에게 큰 압력이 된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20년 넘게 경제난에 시달린 국가로서는 매우 커다란 난제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날로 악화하는 제국주의 간 경쟁, 트럼프 등장으로 더 불확실해진 주변 정세 등은 북한 관료들 내부에 균열을 일으킬 요인들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지난해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7차대회 연설에서 수차례 “일심단결”을 강조한 이면에 불안감이 엿보인다. 북한 관료들 내에 예리한 균열이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장성택 처형 등의 사례에서) 확인됐다.

2011년 아랍 혁명은 혁명의 여파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 시리아·리비아처럼,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국가기구를 확고히 장악한 나라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완전히 피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위기와 더불어 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비단 한국의 박근혜 퇴진 운동뿐 아니라, 특히 경기 둔화 속에 중국 노동자의 저항도 계속 성장한다. 〈중국노동회보〉의 보고를 보면, 2011년 2백 건 정도였던 노동자 파업과 시위 건수가 2015년에는 2천7백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성장하는 중국 노동자 저항이 특정한 조건에서 혁명적 투쟁으로까지 발전한다면, 북한의 외견상 획일적인 정권도 커다란 균열과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피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만과 박근혜의 갈등이 불거졌다. 급기야 2007년 11월에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 박지만의 승리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박용철이 핵심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은 박용철이 요청해 중국으로 떠났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 사건의 배후에 박지만이 있다고 주장했고, 박근혜의 묵인 하에 육영재단 강탈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그알〉에 따르면 박용철은 신동욱 납치 미수 사건의 증거를 갖고 있다

고 주장하며 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떠올랐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용철은 정윤희와 거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원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법정 증언을 20여 일 앞두고 박용철이 돌연 살해된 것이다. 박용철이 살해되고 난 뒤 증거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도 수상한 점이다.

실제로 박용철은 법원에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한 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늘 경호원들을 대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2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는 박용철을 경호했던 황 모씨가 라면을 먹다 천식으로 돌연 사망해

또 다른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알〉은 지인이 박용철 살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냈다는 제보를 소개하며 이 지인도 행방불명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 사건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알〉 방송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에 〈그알〉의 취재원이었던 박지만의 최측근 수행비서가 사망하면서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경찰청장 이철성은 여전히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재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죽음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들과 의혹들은 차고 넘치는데 말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융·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100:64 —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최미진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며 행진한다. 2016년 8월 기준, 여성의 월 임금총액 평균(1백76만 원)은 남성(2백85만 원)의 61.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최근 발표된 OECD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OECD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64퍼센트)다. 이 격차는 16년째 변함없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여성의 낮은 임금이 그저 개인의 능력 차이를 반영한다며 임금 격차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뒤쳐진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2009년 이래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남성을 앞지르고 있고, 여성의 각종 고시 합격률도 증가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성차별의 결과다. 고용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한다. 특히, 이들에게 잘 교육받고 건강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 막대한 부담의 대부분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근본적 배경이다.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시작하는 30대 이전까지는 고용률, 임금, 비정규직 비율 등 모든 측면에서 남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육아기를 거친 후 모든 게 달라진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2016년 경력 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기존 여성의 절반가량이 임신, 육아, 가족 돌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3년이나 됐고, 경력 단절 후 임금은 27만 원가량 줄었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월 임금이 무려 76만 원이나 적었다.

경력 단절 후 여성 노동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일은 흔히 비정규직이고, 이는 저임금의 원인이 된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2016년 54.5퍼센트). 그리고 2016년 현재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가 시간제'인 비중이 3년 전에 비해 곱절이나 늘었다. 이것은 박근혜 표 적폐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로 2002년 5.9퍼센트에 그쳤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2016년에는 무려 12.7퍼센트로 급증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71만 원으로 정규직의 24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제 확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심각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여성들은 더욱더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2016년 여성일자리박람회.

한 걸림돌인 것이다.

성별 직종분리 현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이 존재하고, 이런 직종의 임금 수준이 대체로 낮다. 여성 집중 직종이 실제로 하찮고 주변적인 일이어서 임금이 낮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성차별적 편견이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본가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반찬 값이나 별러 나온' 것인 양 취급하며 임금을 후려치는 것을 정당화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전히 쟁취해야 할 요구

여성들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해도 임금 차별을 받는다.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온갖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해 왔다.

여성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실제 구현되려면 여행원제·여사원제와 같은 성별분리호봉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행원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기업주들이 여성 노동자 임금은 올리지 않고 남성 신입사원의 초봉만 삭감하는 꼼수를 쓴다든지, 인사제도의 이름만 바꿔 임금·승진 차별을 지속했다. 2000년대 들어서 금융권에 도입된 분리직군제는 여행원제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이 분리직군에 속한 노동자들의 압도 다수가 여성이고, 분리직군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

대기업인 효성의 울산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공정에서 일하는데도 임금이 남성의 60퍼센트밖에 안 되는 현실을 폭로하며 소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기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소송에서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승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주들이 분류만 조금 바꿔 '다른 일'이라고 우기면 그만인 것이다.

박근혜가 생색내는 공공기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도 그 실체는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임금과 승진 차별을 계속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일이 거의 같거나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분류만 '보조 업무'로 바꾸는 식일 뿐이었다. 이 밖에도 KTX 여승무원의 사례처럼, 남성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 직무급제는 임금격차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아래 두 절은 김하영, 《임금, 임금격차, 연대》(노동자연대), 2016을 참고했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일부는 오랫동안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 왔다. 이들은 한국 자본가 계급이 없애고 싶어 하는 연공급제가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는 고용이 안정적인 남성 노동자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정한 직무 평가를 통해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직무급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들의 대안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직무 가치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여성 차별 해소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해 전체 노동계급의 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데만 관심 있을 뿐이다. 결국 직무급제는 기존의 여성 차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데만 이용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운동 일부가 제시하는 직무급제 논의는 대체로 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무급제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하락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제안하는 직무급제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대안이 되기

가 어렵다.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자동으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직무 평가의 칼자루가 고용주들에게 쥐어져 있는 한, 그들은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직무급제를 이용할 수 있다. 분리직군을 만들어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면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고, 직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평등한' 임금을 주겠다고 임금 삭감의 명분으로 삼는 식으로 말이다. 설사 노조가 직무 가치 평가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포함될 수 있다 해도, 차별 제거의 진정한 동력은 협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더는 유효하지 않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거로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노동운동의 또 다른 일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제로는 차별 구조를 정당화하고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에 이용될 뿐이라며 이 요구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위에서도 살펴봤듯, 고용주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무기를 악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는 격이 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만 임금이 적다든지, 비정규직만 근속과 수당, 사회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든지 등의 명백한 차별에 맞서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

▶ 11면으로 이어짐

추천 소책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136쪽, 4,000원



## 고 황유미 씨(삼성반도체 근무) 산재사망 10주기

##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벌여 온 치열한 투쟁

이정원

3월 6일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황유미 씨가 스물셋 쯤 젊은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와 그 가족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고통의 삼성과 맞서 싸운 지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황유미 씨의 죽음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백혈병 등 심각한 직업병을 양산한 주범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2016년 12월 현재 삼성전자에서 일한 2백30여 명이 직업병 피해를 반올림에 제보했는데, 안타깝게도 벌써 사망자만 79명에 이른다. 지난 1월 14일에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김기철 씨가 서른두 살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1백12명이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ATK(구 아남), 페어차일드, LG전자 등 다른 반도체 사업장들로 넓히면 사망자가 1백40여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 현황일 뿐 반도체를 다루는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태를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거나 지금도 죽어 가고 있다.

2011년 황상기 씨와 반올림의 끈질긴 투쟁 끝에 고 황유미 씨는 법원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로 처음 인정 받았다.(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거부에 맞서 벌였는데, 삼성은 파렴치하게도 근로복지공단 측의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그러나 지금도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 8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지만, 33명이 불승인되고 고작 7명만 승인받았다(반올림, 2016년 12월 기준). 불승인된 33명 중 4분의 1만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도 고작 5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 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노동자가 직접 증명하지 못했다 등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은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만져야 하는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도 않는다. 기업 비밀이라는 것이다. 산업보건의들은 수백 종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작업환경 측정은 10퍼센트 남짓에 불과해 추정할 자료조차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병 노동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의 극치다.

황유미 씨 사망 이후 삼성반도체 공장 등 여러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들은 하나같이 심각했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조차 “반도체 여성 근로자의 악성 림프종 발병 위험 2.03~5.16배 높다”(2008년), “반도체 취급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에서 여러 발암물질이 부산물로 발생”(2012년)한다고 밝혔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3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관찰”된다고 발표해 그 뒤로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줬다.

#### 이윤 지상주의

삼성전자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 가는데도, 삼성은 산재가 개인 질병일 뿐이라며 사과도 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산재는 기업의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삼성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비정한 이윤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런 악랄한 삼성에 맞서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무려 7년을 싸운 성과로 2014년 5월에 돼서야 삼성전

자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삼성은 비열하게 피해자 가족들과 활동가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그래야 일부 보상만으로 이 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일부 가족들이 가족대책위를 구성했고, 이들은 삼성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나온 조정위원회의 권고문은 반올림의 요구나 유가족이 원하는 피해보상으로는 미흡했다. 삼성도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삼성은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보상 기준 마련, 심사, 집행을 강행했다. 삼성은 대상 질병, 보상 대상, 보상 내용을 모두 축소했고, 이조차 보상 신청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후 1백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들에게 보상 내용을 공개하면 모두 반환하도록 해 침묵을 강요했다. 일부 가족은 삼성의 보상액이 치료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조정위원회 제안에 따라 삼성은 반올림, 가족대책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를 했다. 핵심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삼성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이 기구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에는 여전히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 해 1천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정도로 후안무치”하며 “비밀유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며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황상기 씨 등 유가족들과 반올림의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의 제대로 된 공개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을 촉구하며 강남 삼성본관 앞에서 5백 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퇴진 운동에서 힘을 얻다

반올림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왔다. 이재용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을 뇌물로 바쳤고 그 대가로 수조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삼성의 로비 내용에는 재벌 3세 승계뿐 아니라 삼성 백혈병 논란을 잠재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황유미 씨에게 5백만 원을 던져 준 삼성이 정유라에게 3백억 원을 퍼 준 것을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역겹다.

그러니 이재용 구속은 지난 10년간 처절하게 투쟁해 온 이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는가. 이날 황상기 씨는 떡을 돌렸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 온 이들에게 이재용 구속과 퇴진 운동은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힘이 됐을 것이다.

고 황유미 씨 10주기를 앞두고 3월 3~6일까지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만 인 서명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직업병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 반올림의 끈질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10면에서 이어짐

향평준화를 위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 이런 차별 반대 투쟁을 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투쟁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법률이나 사측이 제시한 ‘동일노동’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순 없다. 국제 노동자 투쟁의 경험을 보면,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만 노동자들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70년 남성 임금의 63퍼센트(딱 현재 한국 수준)였던 영국 여성의 임금이 크게 오른 것은 1969년~1975년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동일임금 쟁취 투쟁을 벌인 덕분이었다. 당시 포드 재봉공들의 동일임금 파업을 비롯해 수많은 동일임금 파업이 벌어졌다. 이 투쟁은 3주 동안 포드 자동차 생산을 완

전히 멈추면서, 여성 임금을 남성의 92퍼센트로 올렸다.”(김하영, 《임금, 임금격차, 연대》, 2016)

한편, 성별 직종분리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이제 별로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성별 직종분리가 여전히 심해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하지 않거나 일의 종류 자체가 달라 ‘동일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의 직무 가치와 여성 보육 교사의 직무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누가 무슨 기준으로 직무 평가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거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명

백한데도 임금 차별을 당하는 현실이 공존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분리된 작업장에서만 일하지는 않는다. 사무, 금융, 공공서비스, 제조업 등 폐광범한 영역에서 남성과 함께, 유사한 일을 한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성별 직종분리 문제만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여성 집중 직종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구도 필요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차별 받을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 여성 노동자의 투쟁 잠재력

여성이 차별의 결과로 저임금 일자리

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데서 덜 중요한 주변적인 일자리라는 뜻은 아니고, 스스로 싸울 능력이 없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희생자가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투쟁할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

임금격차는 고질적이지만, 여러 천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임금 인상을 쟁취해 왔다. 청소, 학교 비정규직, 마트 등 곳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맞서 투쟁해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흔히 남성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를 받았고, 바로 이런 단결된

투쟁 속에서 성차별적 편견이 도전받기도 쉽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남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면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지지한다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과중한 육아부담 역시 단결된 투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대폭 확충, 육아휴직 확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모두에게 이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결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9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주력부대다

이현주

1908년 3월 8일 뉴욕 럽거스 광장에 모인 미국 여성 노동자 1만 5천 명이 소리 높여 외쳤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작업조건과 임금 인상(‘빵’)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표할 권리(‘장미’)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10년에 열린 국제 사회주의 회의에서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제트킨은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이 벌어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삼아 매년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오늘날은 누구나 ‘여성의 날’을 기념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나 자유한국당(새누리당)도 기념할 정도다. 심지어 기업들은 이날을 상품 판매 기회로 삼는다. 그러나 여성의 날의 기원은 착취와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날이다.

박근혜 퇴진 집회 때 자유발언대에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서민들은 배추 한 포기 바싸서 들었다 놔다 하는데, 순실이랑 박근혜는 수백억을 들었다 놔다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오늘날 여성들 사이의 뚜렷한 계급 격차를 드러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2천억 원이다. 독일 수사기관은 최순실의 차명재산이 1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허리띠 졸라매며 평생을 모아도 1억 원을 손에 쥐기 힘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연약한 여성” 운운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 온 박근혜를 비호한 것은 정말이지 열불나는 일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내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해 온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이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끌어올리기에 중점을 뒀지만, 겨우 1~2퍼센트 상승에 그쳤을 뿐이다. 여전히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5.7퍼센트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61.1퍼센트)을 밑돌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절반 넘는 수가 비정규직이다. 여성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한다.

이 때문에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10~11면)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도 여전하다. 출산이나 결혼 경험에 있는 25세~59세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경력 단절은 여성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 양산이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다.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려 착취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일자리다. 시간제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상태인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발표했다(‘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아전인수 격 해석이다. 같은 조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시간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육아”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여성들이 시간제로 내몰릴 이유가 없다

는 얘기다.

박근혜는 ‘무상보육’ 공약을 후퇴시키고, 누리과정 예산도 지역 교육청에 떠넘겼다. 지난 10년 간 8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비취업맘’에게 전일 보육을 지원받을 권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보육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시장화를 확대했을 뿐,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육 시설 운영을 민간 업자들이 맡다 보니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 교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 국공립 보육 시설 비율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며,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 시설에 들어가는 걸 ‘로또’ 당첨으로 여긴다.

그밖에도 노동개약, 민영화, 연금 공격 등 박근혜가 기업주들을 위해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여성 노동계급의 삶을 더한층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마트, 대학 청소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직화해 투쟁을 벌였고, 여성 비율이 높은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전교조도 각각 민영화와 연금 개악에 맞서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다.

무엇보다 커커이 쌓인 이런 불만들은 1천4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분출했다. 여성들은 퇴진 운동의 중요한 일부였다.

#### 적폐 청산

이제 이 운동은 ‘제1의 적폐’ 박근혜 탄핵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불평 등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대중의 염원이 실현되려면, 박근혜·황교안 퇴진뿐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적폐에 맞서 싸우는 데로 운동이 심화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얻은 자신감을 밀거름 삼아 남녀 노동계급이 고유의 의제와 투쟁 방식으로 싸울 수 있도록 고무하고 지지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 반대, 노동개약 철회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개악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출산·육아휴직 실질화 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3월 8일 3시 STOP

—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월 8일(수) | 장소 : 광화문광장

14:30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민주노총

15:00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대회 & 행진

주최 : 3시 스탑 공동기획단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